

---

〈 2020년 12월 ~ 2021년 3월 〉

#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(안)

---

2020. 11. 2.



관계부처 합동





# 목 차

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목표 및 기본 체계 .....	5
III. 분야별 추진 과제 [미세먼지 계절관리제] .....	6
1. 부문별 추가 배출 감축 .....	6
2. 지역계획 수립·이행 .....	13
3. 국민 보호 및 소통 .....	14
4. 한·중 협력 .....	18
IV. 고농도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가동 .....	19
V. 이행점검 방안 .....	20
VI. 향후 계획 .....	21

# I. 추진 배경

1

## 계절관리제 필요성

### □ 매년 12~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

-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 대비 약 20% ↑ (최근 3년 연평균  $24\mu\text{g}/\text{m}^3 \rightarrow 12\sim 3\text{월 평균 } 29\mu\text{g}/\text{m}^3$ )
  - 계절관리 외 기간(4~11월) 평균농도( $20\mu\text{g}/\text{m}^3$ ) 대비로는 약 45% ↑

- 특히,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역시 12~3월에 집중\*되는 등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

\* '19.1월 이후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일(1개 시도 이상) 28일 중 27일이 12~3월에 집중

### □ 고농도 완화를 위해 자체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이 중요

- 고농도 미세먼지는 △기상여건, △국내배출, △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\*하나, 12~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\*\*이 지속 영향

\* (예 : '19.3월 사례) ①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②정체된 대기에 갇힌 상황에서 ③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최고 농도에 이른 이후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해소

\*\* △ 지면냉각으로 대기 확산 불리, △ 적은 강수량, △ 강한 북서풍의 형성으로 국외유입 확대

-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아래에서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우선 우리 자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

※ [참고] 세계 각국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체적인 배출 저감을 강화·시행 중

· (중국) 10~3월 불법 배출 지도단속 강화, 산업 생산량 감축 등 추동계 대책 시행

· (미국) 11~3월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등 겨울철 대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
- 매년 12~3월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추가 배출감축 등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는 근거 마련('20.3.31일 미세먼지법 개정·시행)

☞ 고농도 빈발 시기인 12~3월에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보다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

##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요 및 주요경과

### □ 계절관리제 개요

- (개념)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
  - ※ △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책, △고농도 발생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 등과 구분되며,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('19.10월)을 바탕으로 도입
- (목적)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(base)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, 강화된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

### □ 1차 계절관리제('19.12~'20.3월) 추진 경과

-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1차 국민정책제안 ('19.10월)
  - ※ 산업계·지자체·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 일반국민이 참여, 폭넓은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12~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
- 「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」 수립 ('19.11.1, 3차 미특위)
  - ※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 최초 시행 추진
-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('19.12.1~'20.3.31)
  - ※ 범정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(팀장 :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) 중심으로 이행점검 실시
- 총 5차례 총괄 추진실적 및 성과 발표 ('20.5월, 종합분석 결과 발표)

### □ 2차 계절관리제('20.12~'21.3월) 준비 경과

- 1차 계절제 과제별 효과성\*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(7월, 49명 참여)
  - \* 추진 실적, 소요 비용, 감축 추정량, 현장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국가기후환경회의, 계절관리제 개선·보완 정책제안 ('20.8.2)
  - ※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(수도권 및 인구 50만 11개 도시),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 및 처분 강화, 영농폐기물·영농잔재물 책임 처리 등 6개 과제
- 과제별 추진 방향, 쟁점 검토 및 조정 등(4~10월)
  - ※ 관계부처 회의(2회), 미특위 민간위원 전체회의(2회) 및 분과회의(4회), 배출정보 관리위원회(1회), 지자체 회의(1회), 시민사회 간담회(1회) 등

## 2

## 지난 계절관리제의 성과 및 평가

### □ 1차 계절관리기간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에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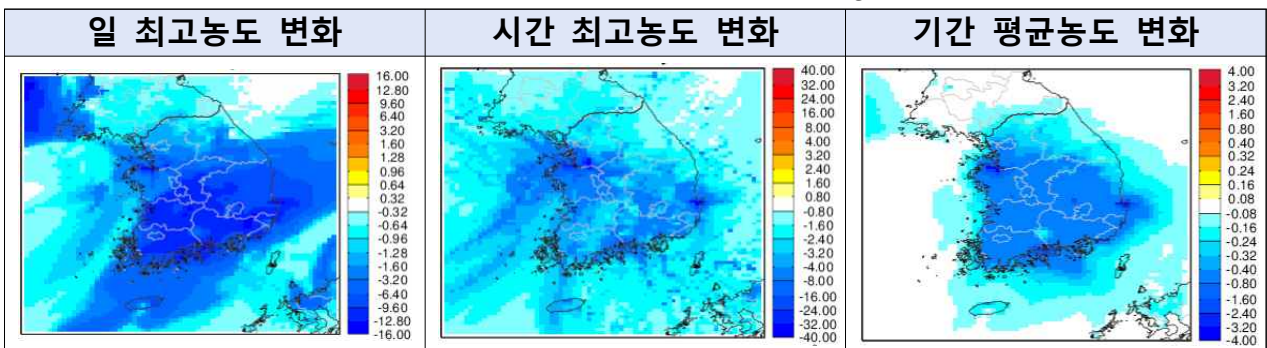
- ◆ 1차 계절관리기간 전년 동기 대비 **초미세먼지 평균농도  $9\mu\text{g}/\text{m}^3$  감소**(33 → 24, 27%),  
▲ **나쁨 일수**(35 → 22일), ▲ **고농도 일수**(18 → 2일), ▲ **중음 일수**(13 → 28일) 개선

- (배출량 감축)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가동축소 등 이행과제 추진으로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\* (16년 동기간 배출량 대비)

\* PM2.5 직접배출 4,709톤, SOx 34,343톤, NOx 44,186톤, VOC 18,524톤 감축

- (고농도 완화) 당초 계절관리제의 시행 목적인 고농도 강도와 빈도 완화에 효과 (일평균 농도 최대  $7.5\mu\text{g}/\text{m}^3$ (세종), 나쁨일수 최대 9일 저감(충남) 등)  
- 평균농도 저감에도 기여 확인('19.12~'20.1월 평균농도 개선 기여율 34%(4.1중  $1.4\mu\text{g}/\text{m}^3$ )

【 계절관리기간('19.12~'20.3월) 농도개선 효과 모델링 결과 ( $\mu\text{g}/\text{m}^3$ , 푸른색일수록 효과 ↑) 】



### □ 과학적 기반 · 현장 실행력 · 국민소통에 있어 아쉬운 점 존재

- (과학적 기반) 대책의 정량적인 목표 미제시로 대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감축 효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대책 추진 제한
- (실행력) 현장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계획 부재\*로 실행력 담보 한계  
\* 1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체 계획을 수립·시행한 시도는 3곳(서울·경기·충남)에 불과
- (소통)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계절관리제 세부 내용에 대한 국민 인지, 일상생활 속 동참 등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

※ 국민의 계절제 인지도는 61.5%이나, 내용을 아는 경우는 20%('20.5월 인식조사 결과)

☞ **지난 계절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·보완 필요**

### □ 올해 초미세먼지는 양호한 상황이나, 언제든지 악화 가능

- '20.1~9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( $18\mu\text{g}/\text{m}^3$ )는 최근 3년 동기간 평균농도( $24\mu\text{g}/\text{m}^3$ ) 대비 25% 감소 (좋음 40%↑, 나쁨 65%↓, 고농도 일수 83%↓)
  - △국내 배출 감축 관련 정부정책 효과와 △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 추세, △코로나 19로 인한 사회·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더하여 △기상 영향의 복합 작용으로 판단
  - 코로나19의 정확한 영향 수준이 불명확한 가운데, 상대적으로 기상 요인이 크게 작용\*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\* 전년 동기간 대비 올해 1~9월 농도 개선 폭('19년  $24.1 \rightarrow$  '20년  $18.3\mu\text{g}/\text{m}^3$ ,  $\Delta 5.8\mu\text{g}/\text{m}^3$ )의 44% ( $\Delta 2.5\mu\text{g}/\text{m}^3$ )가 기상 영향으로 분석(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모델링 결과)
- 기상 여건과 같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과거사례 처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

### □ 코로나19의 상황에도,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

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·사회적 활동감소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영향을 주나, 현장관리 측면에서는 코로나19가 제약요인으로 작용
- 한편, 초미세먼지 노출은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도 초래\* 하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필요
  - 다만,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민·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계절관리제 동참·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
- \* (중국 120개시) 일평균 농도  $10\mu\text{g}/\text{m}^3$  증가시 신규 일간 확진자수 2.24% 증가 (미국 3,087개 지역) '00~'16년 장기노출 농도  $1\mu\text{g}/\text{m}^3$  당 코로나 사망률 8%증가

☞ 지속적인 감축 대책을 시행하되,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하기 위한 탄력성 부여와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보호 조치 병행 필요

## II. 목표 및 기본 체계

### 목 표

####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집중 감축\*

\*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,729톤(20%), SOx 41,404톤(35%), NOx 50,520톤(12%), VOCs 21,054톤(6%)  
(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)

### 핵심 추진 방향

- 과학적 토대 위에 저감 대책의 효과성 제고
- 중앙-지방 대책 연계로 계획의 현장 실행력 강화
-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참여 유도

(연중)  
상시대책

- 부문별 배출 저감(제도+지원사업) 및 국민건강 보호조치 지속 추진

대  
응  
조  
치  
단  
계

(12~3월)  
계절  
관리제

#### 1. 부문별 추가 배출 감축

수송

-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
- 내항선 선박유 강화기준 시행
-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

발전

- 석탄화력 가동 축소
- 전력 수요관리

산업

-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
- 불법배출 집중단속 등

생활

- 영농잔재물·폐기물 책임처리제
- 집중관리도로 지정·운영 등

#### 2. 지역계획 이행

- 지역계획 수립·이행·평가
- 지역 특화대책

#### 3. 국민건강 보호 및 소통

- 민감·취약계층 보호
- 정보제공 확대 및 참여유도

#### 4. 한·중 협력

- 한·중 미세먼지 저감협력 강화
- 한·중 관측·예보협력 강화

(고농도  
발생시)  
비상저감  
조치

- (대응체계)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위기관리 체계 가동
- (대응조치) 위기경보 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에 따라 강화된 조치 시행

### 기대 효과

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3~6일, 평균농도 1.3~1.7 $\mu\text{g}/\text{m}^3$  저감  
 ※ [산출 근거] 최근 3년간과 기상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결과  
 ※ [3년 평균] 12~3월 나쁨일수 : 33일, 평균농도 : 29 $\mu\text{g}/\text{m}^3$



### Ⅲ. 분야별 추진 과제

#### 1 부문별 추가 배출 감축

##### ① 수송부문 추가 감축

#### 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**국가기후환경회의\*** \* '20.8월 정책제안 관련

- (수도권)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 시행\*
  - 3개 시·도 공동 모의단속(11월), 모바일 고지 플랫폼(카카오페이, 문자 등) 활용 등 5등급 차량 차주대상 집중적인 사전 홍보 실시

\* (대상)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46만대('20.9월말 기준)  
(내용) '20.12~'21.3월(주말·휴일 미시행, 06:00~21:00),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
(예외) [인천·경기]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, [서울]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(~'20.12월,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전 기간 제외),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'21.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

- (수도권 외)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자제 홍보·계도
  - 저공해조치 등 지원사업 확대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운행제한 확대 ('21.12월~) 추진\* (2차 계절제 기간부터 6대 특광역시 등 조례 개정 추진)

\* 3차 계절관리제('21.12~'22.3월) : 수도권 + 6개 특·광역시 등 시행 검토

√ (상시대책) △ 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('20년 30만대) 및 DPF 부착('20년 8만대) 지원, △ 전기차('20년 8.4만대) 및 수소차('20년 8천대) 구매보조금 지원 등

√ (비상저감조치) 발령(관심 이상) 시·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

#### 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시행 】

- (시행 경과) 1차 계절제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·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('19.12.1~'20.2.24)하여 월평균 약 26만대 참여
  -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”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지 결정(중대본, '20.2.25일)
- (시행 방안) 2차 계절기간 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“경계” 단계로 조정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·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재시행 검토

□ **운행차량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** 국가기후환경회의

- (운행차)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(화물차, 버스 등)을 중심으로 원격 측정장비(7대)·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특별점검 시행(12월, 3월)  
※ 공항 특수차량(전국 2,800여대 중 노후경유차량 약 55%) 대상 점검강화 병행
- (검사소)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(1,800개소 중 불합격률 저조 15%) 대상 특별 집중단속(12월) 및 검사현황 상시 모니터링(1~3월) 실시

**【향후 과제 : 매연 과다배출 신고차량 임시검사제 도입 추진】**

- (제도 개요) 일정 횟수(2회) 이상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(증빙 포함)된 차량에 대해 공공검사소에서 정기·정밀검사 수준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령
- (추진 계획)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(~'21년), 온라인 신고접수 등을 위한 종합전산 시스템(MeCAR) 기능 개선 추진 병행

□ **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및 연료유 기준 강화** 국가기후환경회의

- (저속운항) 5개 항만(부산·인천·여수·광양·울산)에서 시행 중인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 추진 (1차 31% → 2차 50%)
  -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추가 인센티브\* 제공
- \* 입출항료 감면을 상향('21.1월~, 30 → 40%), 참여 선사 공개 및 홍보 등
- (내항선박 연료유 기준강화) 외항선박 연료유 기준강화('20.1월~)에 이어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\* 시행('21.1월~)
  - 유종 전환(중유 → 경유) 내항선박을 대상으로 경유 유류세를 감면(15%)하고,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저유황유 사용실태를 지속 점검
- \* (B-C유 기준) 현행 3.5 → 0.5%, 정기검사일 도래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

- √ (상시대책) △ 5개 항만 배출규제해역 지정·운영(정박·계류선박 황함유량 0.1%, '20.9월~), △ 공공부문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도입, △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('20.1월~) 및 장비교체 지원 등

## □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

- (관급공사장)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(약 2,100개소)에서 시행 중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
- (민간공사장)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(11월) 확대(1차 11개사 → 2차 15개사 이상)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참여 유도

- ✓ (상시대책) △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<sup>(20년 경유차 지원물량과 함께 30만대)</sup>  
△ 노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(지게차, 굴삭기) 엔진교체 지원<sup>(20년 9천대)</sup>
- ✓ (비상저감조치) 발령<sup>(주의 이상)</sup> 시·도 내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전면제한

## ② 발전부문 추가 감축

### □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**국가기후환경회의**

- (가동중단 및 상한계약)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 발전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(최대 출력 80%) 실시\*

\* '20.11월말 겨울철('20.12~'21.2월) 감축 규모 확정 예정('21.2월말 '21.3월 감축 규모 확정)

※ [참고] 지난 1차 계절관리제 기간 '19.12~'20.2월 최대 15기, '20.3월 최대 28기를 가동중단하고 나머지 발전기는 최대 상한계약 실시

- ✓ (상시대책) △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<sup>(22년까지 10기)</sup>, △ 집진·탈황·탈질설비 등 환경설비 지속 투자, △ 봄철을 중심으로 저유황탄 사용 등
- ✓ (비상저감조치) 발령<sup>(관심 이상)</sup> 시·도 내 석탄·중유발전 상한 제약 시행

## □ 전력수요 관리 강화

- (공공부문) 공공기관 대상 겨울철('20.12~'21.2월)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강화(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 18°C 이하 유지 필요)
  - 적정 실내온도 준수,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확대\* 실시하고, 미흡 기관명은 대외 공표(3월)
- \* 전국 총 1,006개 공공기관 중 280개소 점검 추진
- (민간참여) 일반 국민, 전국 주요상권 등 민간 대상 에너지절약과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에 대해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 실시
  - 유튜브,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, 영상·카드뉴스·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절약 콘텐츠를 제작·배포
- \* 주요매체(TV, 라디오 등) 및 옥외 광고물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확대 추진

## ③ 산업부문 추가 감축

### □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및 이행 국가기후환경회의

- (자발적 감축협약) 1차 계절제 대비 참여사업장 확대(1차 111개 → 2차 160개 이상\*) 등으로 추가 감축 유도
  - 사업장간 교류·협력, 중·소형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위한 권역별 협약 사업장 네트워크 구축·운영 병행
- \* 총량초과과징금 감면 및 점검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포함 업종별 협약 체결(11월)

- √ (상시대책) △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평균 30% 강화·시행('20.1월~), △ 대기 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총량제 시행('20.4월~), △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 (약 1,400여개) 대상 통합허가 제도(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등) 시행('17~)
- √ (비상저감조치) 발령(관심 이상) 시·도 내 의무 감축사업장(전국 494개소)의 가동시간 단축 조정 등 저감조치 실시

□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**국가기후환경회의**

- (첨단장비) 드론·분광학장비·비행선·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장비 확대 운용,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및 주요 산단 집중감시 실시
  - 과학원·유역(지방)환경청 첨단장비 운용인력(14팀, 33명)과 현장 단속 인력(71명)을 연계, 첨단장비 활용 및 단속효과 제고

(1차 계절제 → 2차 계절제)

드론 (36 → 80대)	이동측정차량 (18 → 32대)	분광학 장비 (3식 신규)	무인비행선 (2대)
			

- (민간점검단) 시·도별 미세먼지 민간점검단(1,000명 이상)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상시 감시
    - 공사장 비산먼지, 노천소각 등 민간점검단 단독으로 식별·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되, 감시공무원 단속\*에도 참여·지원
- \* 사업장 점검,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

√ (상시대책) △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<sup>(20년 4천개소)</sup>, △원격 굴뚝감시체계(TMS) 배출량 측정값 실시간 대외 공개<sup>(20.4월~, 전체 625개 굴뚝)</sup>

□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

- (자발적 협약) 주거지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 및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정보 공개 확대\* (11월 대형건설사 자발적 협약 체결)
  - \* 1차 11개 대형건설사 558개 공사장이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90개 공사장에서 측정값 공개 → 2차 600개 이상 / 120개 공사장 참여 추진

#### ④ 생활부문 추가 감축

#### □ 농촌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국가기후환경회의

▶ 폐비닐, 폐농약 봉지 및 용기 등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
- (영농 폐기물) 관계기관 합동 집중수거기간 운영('20.11~12월, '21.3~5월) 등으로 1차 계절제 대비 수거량 제고(35백톤 추가 수거) 추진
  - 시·도별 수거·처리 계획을 수립(~11월)하고, 이행실적 시범 평가(~'21.5월, 환경부) 실시
  -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(5개) 및 지사(4개) 등에 계절관리기간 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, 수거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사항 지원 추진

√ (상시대책) △ 1차 수거지점인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('20년 9,200개소),  
△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(폐비닐 100원/kg, 폐농약용기 100원/개) 지급('20년 20만톤)

▶ 벼, 보리, 옥수수, 콩, 고추,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

- (영농 잔재물) '지자체 책임 수거·처리체계'를 제도화하고, 농업단체, 새마을중앙회 등과 협업으로 농한기(2~3월) 불법소각 방지에 총력
  -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·처리 가이드라인\*을 토대로 지자체별 이행계획 수립·제출(~11월) 및 이행결과 평가(~'21.5월, 환경부) 실시

#### \* [가이드라인 주요 내용] 단계별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·처리 방안

- ① 농경지에서 파쇄 후 경작지 살포 또는 풋거름 등 퇴비로 활용 우선 추진
- ② 파쇄가 불가능한 경우, 민간·공공 재활용시설을 통해 사료화(볏짚·완겨 등) 또는 연료화(펠릿 형태로 가공, 바이오가스화 등) 등 재활용 방안 강구
- ③ 파쇄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, 생활폐기물로 수집·운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소각

- 시·군 마을단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\* 및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 확대(88 → 200개 마을) 등 현장 파쇄 집중 지원\*\*

\* 대상지역 : 농촌지역 157개 시·군(1,413개 읍면, 37,200개 행정리)

\*\* 전국 145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파쇄기(850여대)를 활용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·군, 농업기술센터, 농협, 새마을중앙회 등에서 현장 지원 실시

- 불법소각(논·밭두렁 포함) 방지 제도·단속을 위한 농정·환경·산림부서 합동점검단 운영(1차 계절제 운영 규모 177개 시·군·구-331개 점검단 이상) 병행



### □ 집중관리도로 지정·운영

○ (집중관리도로) 지자체별 대상 도로 선정\*(시·군·구별 최소 1개 이상) 및 도로 청소(일 2회 이상) 등 관리 강화

\* 1차 기간 취약계층 이용 빈도,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을 고려 전국 330개 도로 총 연장 1,732km 선정·관리 → 2차 387개 도로 총 연장 1,950km 선정·관리

√ (기타 생활부문 상시대책)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대당 20만원(저소득층은 50만원) 지원<sup>(20년 지원물량 35만대)</sup>

※ 대기관리권역법 시행(20.4.3일)에 따라 권역내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제조·공급·판매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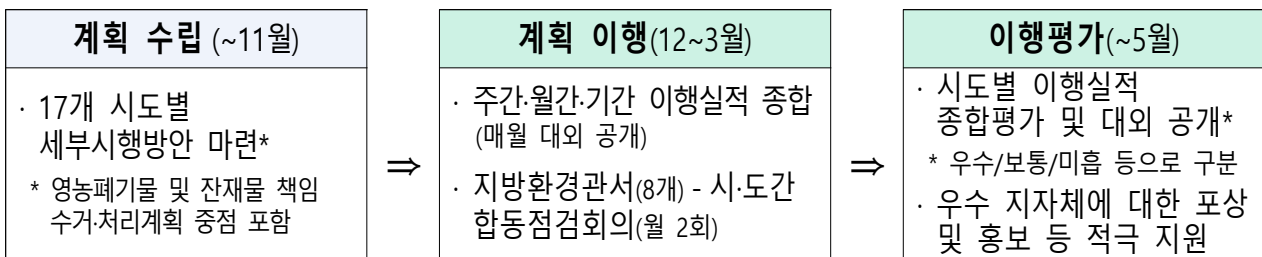
## 2

## 지역 계획 수립 · 이행

### ① 지역계획 수립 · 이행 · 평가체계 구축

-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이행\*하고,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 추진

\* 미세먼지법 개정·시행('20.3월)에 따라 시·도지사의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규정, 추진과제 및 물량 중심의 실행계획으로 수립 추진



※ 2차 계절관리제에 시·도 이행실적 평가를 시범 도입하고,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진

### ② 지역 특화대책 추진

- 각 시·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, 자체적으로 강화·차별화된 지역 특화대책 추진

#### 【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】

- √ (산업) △ 추가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지원 [충남 100개소, 울산 30개소, 인천 65개소, 경남 30개소], △ 유기용제 도장시설 특별지도 점검\* [대전] 등
  - \* 대전 시내 대기배출사업장 645개소 중 229개소에서 도장시설 운영 중
- √ (수송) △ 시영주차장(106개소)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% 할증 [서울], △ 항만출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[부산]
- √ (생활) △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<sup>(30개소)</sup>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·관리 [인천], △ 자체 보유 파쇄기<sup>('19년 12대 → '20년 110대)</sup>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 지원[경기], △ 3월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집중단속(全지역 주 2~4회) [전북], △ 주요 간선도로 재비산먼지 집중저감 [대구], △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상향 지급 [서울] 등
- √ (기타) △ 시·군별 계절관리제 실천사례 경진대회 및 포상 [전북], △ 민간 대기 측정망(41개소) 통합운영 개시 [충남]



## ① 민감·취약계층 보호

## □ 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

○ (점검)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·노인요양시설 등 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대상 각 시설별 기관장 책임하에 전수 자체점검 실시(~11월)

-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현장점검\*은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

\*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확인, 공기청정기 설치·관리 현황 등

## 【취약·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계획(안)】

구 분	내 용
어린이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절기 안전점검('20.11~'21.1월) 연계 전체 어린이집의 15%(약5,300개소) 이상 현장점검</li> </ul>
유치원·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각급학교 자체 전수점검(2만여 개, '20.11월) 결과 미흡사항 발생 학교를 대상으로 시·도 교육청 보완점검 및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</li> <li>※ 학교(자체점검) → 시·도교육청(보완점검) → 교육부(학교 안전점검)</li> <li>■ 학교 교실 미세먼지 측정기기* 설치 추진(~'21.2월)</li> <li>* 공기정화장치에 부착된 미세먼지 측정센서가 없는 경우 간이측정기 구입(학교 당 2개이상)</li> </ul>
노인요양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절기 안전점검('20.11~'21.1월) 연계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90%(약7,600개소) 이상 현장점검</li> </ul>
사회복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절기 안전점검('20.11~'21.1월) 연계 지역자활센터, 장애인거주시설, 지역이동센터 등 대상 공기청정기 임대료 예산 집행상황 포함 10%(약450개소) 이상 현장점검</li> </ul>

## □ 저소득층 및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

○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연내 보건용 마스크 총 약 1억 2천 3백만매(1인당 50매) 이상 보급\*

\* '20.10.15일까지 1억 130만매 배부 완료, 계절관리제 시행전까지 잔여물량 추가 보급 및 지자체별 마스크 구매·보급 현황 모니터링

○ 미세먼지에 취약한 업종(건설업, 환경미화업, 농업인 등) 옥외작업자 약 19만명에게 마스크 415만매(1인당 20~25매) 보급(~11월)

## ② 국민 활동공간 관리 강화

### □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 강화

- (지하역사 등) 지하철역(전체 600여개소)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실시, 터널 물청소 및 공기정화장치 관리 강화 등 추가 저감조치 시행 독려
    - (국가철도) 지하역사(61개소) 공기청정기 최적 운영(자동측정기 연계), 지상역사 대형공기청정기 추가 설치\*, 대합실·승강장 습식청소 강화\*\*
  - \* 현재 3개 역사(서울역 등) 설치운영 → 12월말까지 12개 역사(대전역, 울산역 등)에 추가 설치
  - \*\* 지상 405개역, 지하 61개역 대상 평상시 1회/일 → 계절관리제 기간 3회/일 이상
- (공항) 여객터미널(19개) 습식청소 확대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    - \* (한국공항공사) 공항별 공조기 내부 청소 및 여객청사(2회/일) 청소 실시
    - (인천공항공사) 실내공기질 모니터링(6개소) 및 여객청사(2회/일) 청소

### □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

- (생활밀착형 지원사업) 17개 시·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\* 3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조속 추진('21.1월~)
- \*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'20.10월말 기준 16개 시·도 29개소 지정 완료(11월말까지 17개 시·도 30개소 이상 지정 추진)

#### 【 집중관리구역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주요 내용(안) 】

- ① (**측정**) 기초지자체별 1~2개 수준인 기존 국가측정망 이외에 도로변, 주거지역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IoT 측정망 구축\*
  - \* 환경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('19.8월 시행)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한하여 설치
- ② (**정보 제공**) 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농도 알리미, 바닥표시등, 미세먼지 신호등 등을 활용한 생활 속 정보 제공
- ③ (**회피·저감**) 스마트 에어샤워(취약계층 이용시설 출입구), 차단망, 산단인근 미스트 분무 시스템 등 회피·저감 사업 지원

### ③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

#### □ 실시간 계절제 이행상황 공개

- 환경부 대기환경정보(에어코리아 앱) 등에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공개하는 통합 뉴스룸 운영\*, 동영상·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정보제공
- 국내·외 정책동향지(매주), 추진실적 보도자료 배포(매월) 등을 통해 정보제공 확대

#### 【\* 통합 뉴스룸 제공자료 (안)】

구분	주요 내용
미세먼지 농도	· 실시간 농도 (지난 계절제 대비 누계 포함)
주요 정책 추진상황	· 실시간 석탄발전 배출현황 (계절제 누계, 과거 5년 대비) · 실시간 사업장 배출현황(TMS 자료) · 사업장 자발적협약 이행을 통한 감축량 현황 (월별) · 부문·지역별 주요대책 추진 실적(월별)
기타	· 대책 홍보자료 등 종합

#### □ 대국민 예보서비스 품질 제고

- (예보정확도) 국외유입 측정망 운영, 한·중간 교류 중인 예보정보 활용 등으로 예보정확도 제고 추진
  - 환경위성(천리안2B, '20.2월 발사)· 서해도서(7개)· 함정(35척)· 항만(15개) 측정망 등 활용, 입체적이고 촘촘한 국외유입 측정
  - 중국 대기질 예보정보\* 등과 종합적으로 분석, 계절관리기간 내 국외유입 상황을 조기에 판단하고 국내예보에 반영
    - \* '19.12월 이후 11개 중국 성·시의 예보정보 공유 중(1일 1회)
- (주간예보)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간예보의 공간적 상세정보 제공을 위해 예보권역 세분화\* 시행(12월~)
  - \* 예측기간 D+5~D+6 예보 권역을 6개 권역에서 19개 권역으로 확대

#### ④ 국민 참여 유도

○ 국민이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·과학적인 자료\*를 활용, 홍보 및 교육 집중 추진

- 주요 과제 및 대상별로 수요자 맞춤형 전달 수단을 활용

\*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절관리제 필요성, 개인별 행동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제시 등

대상	주요 내용	맞춤형 전달 수단
일반 국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√ (메시지) "<u>우리 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</u>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별 실천에 따른 효과 제시, 코로나 19 영향, 한중협력 추진 사항 등도 포함</li> </ul> </li> <li>√ (실천 방안) 적정 실내온도 유지,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, 친환경운전 습관 지키기, 폐기물 배출 줄이기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 단지(1.1만개) 포스터 발송 (엘리베이터 영상송출 병행)</li> <li>· 국가전광판, 고속도로 등 1.7만개 정부보유 영상송출 매체 활용</li> <li>· 지역 맘카페, 지역언론,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상 간담회(비대면 검토)</li> <li>· 라디오 광고, 유튜버 협업, 온라인 이벤트 병행</li> </ul>
5등급 차량 차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√ (메시지) "<u>저공해조치, 서둘러주세요</u>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√ (실천 방안) DPF 부착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, 계절제 기간 가급적 운행 줄이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모바일 전자고지 플랫폼* 활용, 운행 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</li> <li>* 카카오페이, 네이버, KT(문자) 등 활용 운행 차주에게 실시간 고지 가능</li> </ul>
농·어업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√ (메시지) "<u>수확물만 가져가시고, 잔재물은 자연에 돌려주세요</u>", "<u>태우면 매연 뿌리면 자연</u>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농도시 야외 작업 자제 등 건강보호에도 유의</li> </ul> </li> <li>√ (실천 방안) 영농폐기물·잔재물, 어업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리플렛·포스터 배포(15만부) 및 농어업인 유관기관 누리집 활용 등</li> <li>· 농업기술센터·농협 등 대상 소각방지 교육, 농업인 대상 문자 안내</li> <li>· 어촌지도자 등 어업인 대상 교육시 행동요령 및 실천방안 교육(5만명)</li> </ul>
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√ (메시지) "<u>기업의 동참으로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</u>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 작업자의 건강 보호에도 유의</li> </ul> </li> <li>√ (실천 방안) 계절제 기간 자발적 감축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과우수 사업장 홍보/포상 강화</li> <li>· 산업안전 전광판, 안전보건공단 기술 지도 등 활용 건강보호 가이드 및 자발적 감축 참여 안내</li> </ul>
건물관리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√ (메시지) "<u>난방비도 줄이고, 미세먼지도 낮추고! 적정온도 유지로 일석이조</u>"</li> <li>√ (실천 방안) 실내 적정온도(20℃) 유지 등 에너지 절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튜브, 인터넷 B광고* 등 활용</li> <li>* 관련 키워드 검색시 상단에 노출</li> <li>· 민간상권 대상 비대면 홍보·계도 등</li> </ul>

### □ 한·중 미세먼지 저감협력 강화

- (정례회의) 한·중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책(韓:계절관리제, 中:추동계대책) 추진상황 공유 및 상황판단을 위한 정례회의\* 개최
  - \* 대기정책담당자 및 예보담당자 참석하에 각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, 기간 중 주요 조치내용 등 공유논의(계절관리기간 2회 이상 실시)
- (청천계획) '한·중 청천(晴天, 푸른 하늘)계획\*' MOU('19.11월 체결)'의 '20년 세부 이행계획'에 따라 저감정책 교류\*\*를 집중 실시
  - \* 3개 부문(대기 정책 및 기술 교류, 공동연구, 기술산업화) 6개 사업으로 구성
  - \*\* (11월) 한중 장관 정례회담(영상),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등 (12월) '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, (3월) '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
- (저감산업) 국내 미세먼지 저감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한·중 대기환경산업기술박람회(11월) 및 중국 지방성 대상 기술교류회(3월) 실시
  - ※ 중국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으로 '15년부터 '20.9월까지 총 누적 25건 1,036억원 계약
- (지방정부) 한·중 양국의 지방정부(韓:시·도 ↔ 中:성·시)간 정책 공유,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, 인적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역량 제고
  - ※ (충남) 제30차 충남-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 개최('21.1월)
  - (서울) 서울-베이징 통합위원회 대기질 포럼 개최('21.2월) 등

### □ 한·중 관측·예보 협력 강화

- (한·중 공동관측) 한·중 대기질 공동 관측지점(8개 지점 - 中: 베이징, 바오딩, 창다오, 다롄 韓: 서울, 제주, 인천, 광주)에 대한 집중관측\* 강화
  - \* 하계 1회/6일, 동계 1회/2일 관측 중 → 계절관리제기간 고농도 발생시 1회/일로 관측횟수 확대 및 모델링 분석 강화
- (한·중 예보협력) 한·중 예보정보·기술교류 워크숍 개최(11월) 등을 통해 양국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·운영\*('19.12월~) 등의 성과제고 추진
  - \* 중국 11개 성·시의 향후 3일간 대기질지수(AQI)를 예보관 의사결정시스템 내에 표출하여 국내 대기질 예보 시 활용 ⇒ 예보 정확도 및 사전대응력 제고

## IV. 고농도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가동

- (대응체계) 고농도 발생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  - 고농도 발생시 '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(19.10월)'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위기관리 체계 가동
    - 고농도 지속 또는 악화시 위기경보 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를 상향하고 기관별 상황실(본부) 설치·운영

▶(관심)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운영, (주의) 부처별\* 상황실 추가 운영  
 \* 산업부·농식품부·해수부·국토부·교육부·복지부·고용부  
 ▶(경계·심각) (경계)중앙사고수습본부(환경부장관), (심각)중앙재난대책 본부(행안부 장관), 지역사고수습본부(환경청장),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 가동

- (저감조치) 위기경보 단계별(1~4단계) 강화조치 시행

【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안】

비상저감조치 단계	단계 1 (관심)	단계 2 (주의)	단계 3 (경계/심각)
발령 기준	당일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+ 내일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 예보 등	농도 악화 또는 관심 단계 3일 지속	농도 악화 또는 주의/경계 단계 3일 지속
기본 방향	공공+민간 대응	공공부문 대응강화	재난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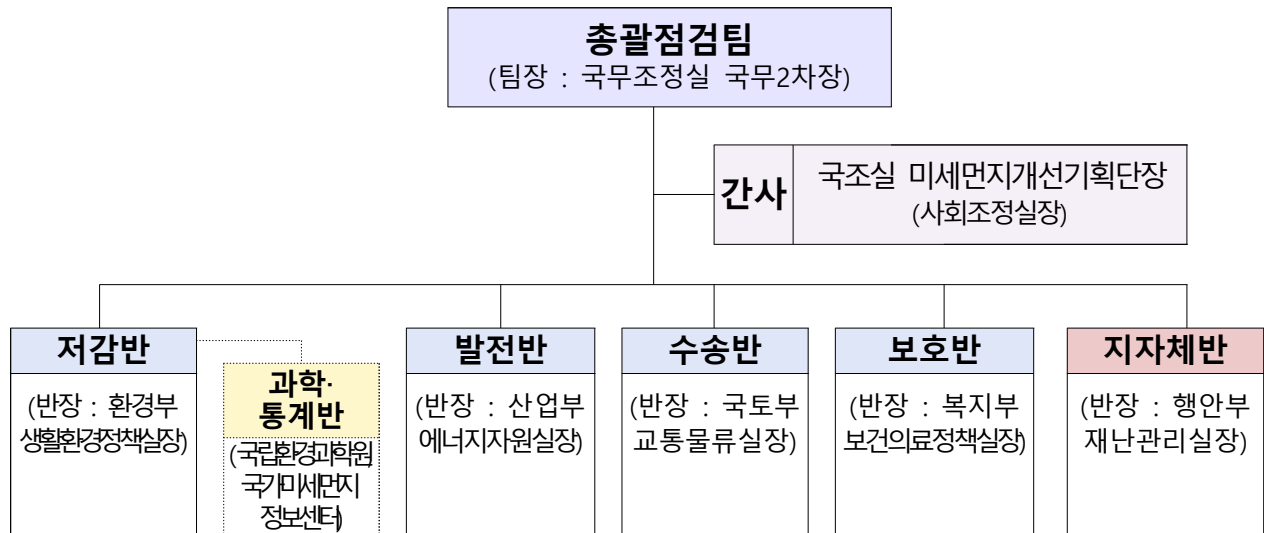
- (단계 1)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시행\*,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시행, 도로 물청소 강화(1회→2~3회 이상, 소방차 물분사 지원) 등
  - \* 전체 석탄·중유 발전 상한제약(63기), 의무사업장 494개소 가동률 조정 등
- (단계 2) 관용·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(긴급차량 등 제외), 전국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, 탄력근무 권고 등
- (단계 3·4)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및 민간공사 중단 권고, 민간 보유 물자 동원(예: 살수차), 마스크 무상 배포 등

## V. 범정부 이행점검 방안

□ (기간) '20.12.1 ~ '21.3.31(4개월)

□ (구성) 총괄점검팀(팀장 : 국무2차장) 및 5개 점검반

\* 점검반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 참여



※ 환경부 소속으로 별도의 종합상황실(실장:(正)차관, (副) 생활실장) 설치·운영('20.11~'21.3월)

□ (역할) 계절관리제 이행계획에 대한 부처·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 및 배출량 감축실적 점검

○ (부처) 각 점검반장 책임 하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 등 파악

○ (지자체)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추진 점검(환경부·행안부)

\*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(매주/매월/전체기간)

○ (정보센터) 배출량 감축실적(매월) 및 농도 저감 효과(2회) 분석·공개

□ (운영)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상황관리, 주기적 점검회의 및 현장 조치 실태 확인

○ (이행점검) 일일상황보고 → 주단위 점검 → 월단위 점검

○ (현장점검) 분야별 관계부처 합동점검팀 구성·운영(코로나19 상황 감안)

## VI. 향후 계획

□ 부처 /시·도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 : 11월 중

-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확정 (~11월 2주)
- 17개 시·도별 세부시행계획 마련 (~11월)

□ 대국민 집중 소통·홍보기간 운영 : 11~12월

- 부문 및 대상별 소통·홍보 이행 (통합 뉴스룸 개설 등)

□ 계절관리제 이행(12~3월) 관리 및 이행실적 결과 발표 : ~5월

-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 지속 점검
  - 고농도 발생시 환경부 소속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상황 관리
- 과제별·지자체별 추진실적 종합 및 발표(매월 2주 - 전월 실적)
  - ※ 2월 중순에는 계절제 전반기('20.12~'21.1월) 농도개선 효과(모델링) 결과 포함
  - ※ 계절관리제 종료 직후(4.1일) 종합 추진실적 중간점검 결과 발표
- 계절관리제 종합 이행실적(시·도평가 결과 포함) 및 효과 분석·발표(5월)



# 붙임 1

## 지난 계절관리제와 비교 (주요 변경사항)

구 분		1차 계절제('19.12~'20.3월)	2차 계절제('20.12~'21.3월)
대책 체계	목표 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량적 목표 미설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량적 목표 설정 (新)</li> <li>-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농도저감 효과</li> </ul>
	지역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계획 부재 (서울·충남만 수립)</li> <li>지역 특화대책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(强)</li> <li>- 이행실적 시범평가 및 공개 (新)</li> <li>지역 배출특성 고려 특화대책 (新)</li> </ul>
배출 감축	수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등급차량 운행제한 未 실시 * 근거 법 개정 지연('20.3.31일 시행)</li> <li>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(참여율 31%)</li> <li>외항선박 연료유 기준강화('20.1~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등급차량 수도권 內 운행제한 (新)</li> <li>- 수도권 外는 계도·홍보, 조례개정 추진</li> <li>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(31→50%) (强)</li> <li>내항선박 연료유 기준강화('21.1~) (新)</li> </ul>
	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석탄발전 가동축소 * 겨울철 최대 15기, 봄철 최대 28기 가동중단</li> <li>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 (249개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축소 (구체적 규모 11월 설정)</li> <li>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결과 공표 (强)</li> </ul>
	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이행(111개 사업장)</li> <li>첨단감시 장비, 민간점검단 활용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(160개 사업장 이상) (强)</li> <li>첨단감시 장비 확충, 민간점검단 지속 운영으로 불법배출 단속 강화 (强)</li> </ul>
	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속·홍보 중심의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 전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농잔재물 현장 파쇄 집중지원 (强)</li> <li>* 일제 파쇄의 날 확대(88개→200개 마을 이상),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파쇄기 활용 강화</li> </ul>
건강 보호 및 소통	취약 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중심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적정운영·관리 중심 시행</li> </ul>
	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국민 홍보 노력에도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보는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객관적·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·교육 집중 추진 (强)</li> </ul>
한·중 협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천계획 MOU 체결 및 이행 등 협력의 틀거지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협력체계 안에서 양국간 교류 집중 추진 (强)</li> <li>-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응대책 상황 공유 정례회의 개최 (新)</li> </ul>

구 분	계획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(계절관리제)	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(비상저감조치)		
		1단계(관심)	2단계(주의)	3단계(경계/심각)
수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등급 차량 운행제한 (수도권)</li> <li>· 행정·공공기관 2부제 (수도권·6개 특광역시, 코로나19 경계 단계로 격하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등급 차량 운행제한 (전국)</li> <li>· 행정·공공기관 2부제 (전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미이행시 불이익</li> <li>※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용(공용)차량 운행 전면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</li> <li>※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간차량 2부제 (경계: 자율/심각: 강제 검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</li> </ul> </li> <li>· 행정·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제한 (임직원차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</li> <li>※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(MOU)</li> <li>· 민간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(자발적 협약)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(전국, 모든 관급공사장)</li> </ul>	
발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석탄화력 가동중단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(11월말)시 최종 확정</li> </ul> </li> <li>· 가동중단 외 석탄화력 상한계약 (전력수급·계통 상황 고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동 중인 전체 석탄·중유화력 상한계약 (전력수급·계통 상황 고려)</li> </ul>		
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무사업장(494개소) 가동률 조정 등</li> <li>·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(배출량 15~20% 감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(배출량 25~30% 감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</li> <li>·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(필수사업장 제외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거지 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및 농도정보 공개 확대 (자발적 협약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·변경 (전국 35,000개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간공사 중단 권고</li> <li>·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 (첨단감시 장비, 민간점검단 등 활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(환경부·지자체 중심, 관계부처 참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(점검·감시인력 지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</li> </ul>
생 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(물청소 2~4회 실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로청소 강화 (물청소 3회 이상)</li> <li>·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간 청소·살수차 동원</li> </ul>
건강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사전점검</li> <li>· 저소득층·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</li> <li>·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</li> <li>· 재난문자, 홍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탄력적 근무 권고</li> <li>·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(재난방송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휴업·휴원 명령 검토</li> <li>· 마스크 무상 배포</li> </ul>